

형 법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행위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아니던 행위에 대하여 판례를 변경하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행위 이후에 보호관찰에 관한 규정을 새로 입법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환각물질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그 성질에 관하여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로 그 한계를 설정하여 놓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과실범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허용된 위험에 관한 원칙은 위험한 업무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축소시켜주는 의미를 가진다.
- ②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져 불이 난 경우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모든 범죄가 고의범과 과실범의 두 가지만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가 결합된 제3의 범죄형태도 가능하다.
- ④ 고속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 ⑤ 선행차량에 이어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자를 연속하여 역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3.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년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도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②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8. 다음 중에서 형법상 신분과 관련된 법률적 효과와 기능에 대한 것으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친족상도례의 규정에서의 친족관계는 범행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혼외자의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 ② 비점유자가 업무상점유자와 공모하여 횡령한 경우 비점유자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동정범관계가 성립된다.
- ③ 성인용 오락영업허가업소의 지배인도 업주의 유사사행행위 범행에 가공한 행위의 정도 및 내용에 따라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 ④ 의사 甲이 의사가 아닌 乙의 병원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경우 의료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
- 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경우 기부행위주체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9. 甲은 고향에 있는 자기 소유의 빈집을 철거하기 위하여 방화를 하였는데, 갑자기 불어온 강풍에 의해 이웃집에 불이 옮겨 붙어 그 이웃집까지 전소되었다. 甲의 죄책은?

- ① 실화죄
- ②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방화죄
- ③ 일반건조물방화죄
- ④ 연소죄
- ⑤ 무죄

10. 다음 사례 중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착오를 모두 고른 것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 甲이 제약회사 근무자인 乙로부터 제약에 쓰일 마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약회사에 쓰이는 마약은 구해주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생아편을 구해준 경우
- B.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줘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요하는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 C. 기공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시술행위를 한 자가 자기는 정부공인의 체육종목인 '활법'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한 경우
- D.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자가 이미 같은 주소에 향토예비군대원신고가 되어 있으므로 재차 동일 주소에 대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 E.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부대 안에 유류를 저장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은 경우

- ① B D E
- ② A B E
- ③ B C D
- ④ C D E
- ⑤ A C D

11. 다음 중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는?

- | | |
|-------------------------|----------------------|
| ①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 ② 도주(형법 제145조) |
| ③ 현주건조물방화(형법 제164조 제1항) | ④ 퇴거불응(형법 제319조 제2항) |
| ⑤ 절도(형법 제329조) | |

12.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 인감대장	B. 자동차등록부	C. 선거인명부	D. 법원의 판결문원본
E. 여권	F. 주민등록부	G. 토지대장	

- | | |
|-------------|-------------|
| ① A C E F G | ② B C D F G |
| ③ A B F | ④ B E |
| ⑤ F | |

13. 피고인은 절도행위가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곧바로 뒤쫓아 온 보안요원에게 불갑혀 보안사무실로 인도되어 피해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던 중 체포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음 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행위는?

- ① 절도현장에서부터 2km 떨어진 곳까지 추격당하여 체포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추격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 ②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다시 담을 넘어 도망치던 중 추격해 온 피해자에게 범행현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불갑히게 되자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 ③ 피해자의 집에서 절도범행을 마친지 10분가량 지나 피해자의 집에서 200m 가량 떨어진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에서 피고인을 절도범이라고 의심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불갑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 ④ 강도가 흉기로 협박하다가 항거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 ⑤ 절도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돈지갑을 탈취하였다.

14. 재단법인 불교방송의 이사장 직무대리인 甲은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회계처리하지 않고 한편으로 재단법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면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 乙에게 적정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다. 乙은 사실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출 이후에 乙은 이자를 제때 납입하였고 나중에 원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이 경우 甲의 형사책임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 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

- ③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고의가 없었으며 또 실제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나 재단법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킬 고의가 없었으며 또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
- 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15. 甲은 1990년 범한 죄로 1991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다. 그 후 다시 1992년에는 1989년에 범한 죄로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경우 1991년에 확정되었던 집행유예선고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면제된다
- ② 유지된다
- ③ 실효된다
- ④ 다시 선고된다
- ⑤ 취소할 수 있다

16. 甲은 자기소유 부동산을 A에게 매도할 뜻이 없으면서도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뒤 다시 동일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았다. 그런데 C가 더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겠다고 하자 甲은 다시 C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죄
- ② 횡령죄
- ③ 사기죄
- ④ 사기죄와 배임죄
- ⑤ 무죄

17. 甲이 변심한 A(女)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친구 乙에게 A를 강간하도록 부탁하자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런데 그 후 乙은 마음을 바꾸어 A를 강제추행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 ① 甲은 강간죄의 교사범, 乙은 강제추행죄
- ② 甲은 강간죄의 예비·음모와 강제추행죄의 교사범, 乙은 강간죄의 예비·음모와 강제추행죄
- ③ 甲은 강제추행죄의 교사범, 乙은 강제추행죄
- ④ 甲은 무죄, 乙은 강제추행죄
- ⑤ 甲은 강간미수의 교사범, 乙은 강제추행죄

18. A의 자취방에서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甲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0시 30분경 A를 칼로 찔러 살해하고 죽은 A의 곁에서 6시간쯤 있다가 아침에 A의 자취방 벽에 걸려 있던 A의 점퍼를 뒤져보니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 있어서 강도로 위장하기 위하여 그 점퍼를 입고 집으로 왔다. 甲은 그 날 10시쯤 은행에 가서 죽은 친구명의로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예금을 인출하였다. 이 사례에서 살인죄 이외 甲의 형사책임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주거침입죄 및 사인부정사용죄의 경합범
- ②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의 경합범
- ③ 절도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경합범
- ④ 절도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의 경합범
- ⑤ 절도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주거침입죄의 상상적 경합범

19. 다음 중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심은 나무의 과일
- ② 전기
- ③ 평소 행위자가 전적으로 보관·관리하던 비자금 관계 서류와 금품이 든 가방
- ④ 백일사진
- ⑤ 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린 어음

20. 甲은 뒤뜰에 널어둔 세탁물 중에서 종종 여자의 속옷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기던 중, 어느 날 밤 세탁물을 널어놓고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심야에 乙이 담을 넘고 들어와 여자 속옷을 두 가지 훔쳐 다시 담을 넘어 도망하려는 찰나에 甲은 乙을 붙잡아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게 인도할 때까지 자기의 집 지하실에 감금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의 입장에 의함)

- ① 甲은 정당방위로서 무죄, 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② 甲은 정당방위로서 무죄, 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
- ③ 甲은 감금죄, 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④ 甲은 감금죄, 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
- ⑤ 甲은 자구행위로서 무죄, 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

21. 甲은 설명절 귀성열차표를 예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소매치기를 하려고 A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으나, 이를 목격한 다른 사람 B가 “소매치기다”하고 고함을 지르자 미수에 그친 보복으로 B의 얼굴을 한대 가격하고는 도주하였다. 甲의 죄책은?

- ① 강도미수죄
- ② 절도미수죄
- ③ 절도미수와 폭행죄
- ④ 준강도미수죄
- ⑤ 준강도죄

22. 방조범에 관한 다음 설명에 대해 옳고 그름을 맞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 편면적 중범에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방조범만 성립될 수 있다.
- B. 중범의 방조행위는 작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된다.
- C. 피방조자가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때에 방조자는 중지미수가 된다.
- D. 간접적으로 정범을 방조하는 경우 정범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다.
- E. 미수의 방조에서는 방조자의 고의가 부정된다.

- ① A(0) B(0) C(×) D(×) E(×)
- ② A(0) B(0) C(0) D(×) E(×)
- ③ A(×) B(×) C(0) D(0) E(0)
- ④ A(×) B(0) C(×) D(0) E(0)
- ⑤ A(×) B(×) C(×) D(0) E(0)

23. 준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 절도가 친족간의 범행인 경우에도 준강도죄는 성립한다.
- B. 낮에 주거에 침입하기는 했지만 훔칠 물건을 수색하기도 전에 주인과 마주쳐 주인을 때리고 도망하게 되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C. 밤에 절도를 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했다가 그 상태에서 주인과 마주쳐 주인을 폭행하고 도망가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D. 절도범인 甲을 체포하려고 피해자가 폭력을 가해 오자 甲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솔뚜껑을 들어 그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그 솔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甲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E. 절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은 준강도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없다.

- ① A, E
- ② B, C
- ③ D, E
- ④ B, D
- ⑤ A, C

24. 다음은 신용카드 관련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 절취한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절도범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B.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타인명의로 자신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C.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여 소지한 경우 아직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된다.
- D. 타인이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없다.

25. 의무의 충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 놓은 것은?

- A. 의무의 충돌이란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2개 이상의 의무가 존재하여 의무자는 그 중 일부의 의무만을 이행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그 결과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 B. 의무의 충돌을 정당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의무교량을 기준으로 삼는 의무의 충돌은 이익교량을 기준으로 삼는 긴급피난과 구별되며 정당행위 중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본다.
- C. 의무의 충돌을 긴급피난의 일종 또는 그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충돌상황의 긴급성과 법적 평가기준의 유사성 때문에 긴급피난의 일종으로 보거나 그 특수한 형태로 본다.
- D. 여러 개의 부작위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도 의무의 충돌에 해당한다.
- E. 면책적 의무의 충돌의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 F. 면책적 의무의 충돌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 G. 의무의 충돌이 정당화되든 면책사유로 인정되든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불가벌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 ① A, D, F
- ② D
- ③ A, G
- ④ C, D, G
- ⑤ B, E

26. 다음 중 중지미수가 성립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절도의 고의로 야간에 타인 주거의 담을 넘어 현관 쪽으로 접근하던 중 갑자기 지난밤의 불길한 꿈자리가 떠올라 그만 두었다.
- ② 甲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며칠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간음은 하지 않았다.
- ③ 甲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목과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
- ④ 甲은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이 창틀에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소화하였다.
- ⑤ 甲은 대마 2상자를 사가지고 돌아오다 이 장사를 다시하면 내 인생을 망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불태웠다.

27. 다음은 강도죄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 감금행위가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 B.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는 행위와 피해자가 이에 극도의 흥분을 느끼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이를 피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된 사실과는 인과관계가 있다.
- C. 수회에 걸쳐 ‘총을 훔쳐 전역 후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하자’는 말을 하는 것은 강도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D.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은 자가 그 추심과정에서 폭행을 가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은 부정된다.
- E.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후에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곳과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강도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28. 배임죄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발생시키는 처분을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한다.
- ②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시가보다 싸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별도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 ⑤ 적대적 M&A로부터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업원의 자사주 매입에 회사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9. 다음은 상해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고 그름을 맞게 표시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 B. 신체의 완전성(침해)설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두 상해에 해당한다는 견해로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 및 눈썹, 머리카락을 절단하는 행위도 상해행위에 해당한다.
- C. 절충설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외에 신체의 외모에 현저한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도 상해에 해당하므로 눈썹이나 머리카락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절단하는 행위는 상해에 해당한다.
- D. 눈썹, 턱수염, 머리카락을 절단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
- E. 운전자가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으나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두어 조수가 그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시동열쇠를 꽂아 둔 행위와 사고로 인한 상해결과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① A(0) B(0) C(0) D(0) E(0)
- ③ A(0) B(×) C(0) D(0) E(×)
- ⑤ A(0) B(×) C(0) D(×) E(×)

- ② A(×) B(0) C(×) D(×)E(0)
- ④ A(×) B(0) C(0) D(0) E(×)

30. 다음 대법원 판결요지의 ()를 적합한 용어를 넣어 완성시킨다고 할 때, ①-⑤에 각각 대응되는 용어가 잘못 된 것은?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인지 (①)인지에 따라 이를 ()와 ()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 겸 (②)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의 객체를 ()이 아닌 ()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③)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④)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⑤)로 처벌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① 재산상의 이익
- ② 이득죄
- ③ 재물
- ④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⑤ 절도죄

31. 검사가 형사 甲에게 A를 검거하라고 지시하였으나, 甲은 오히려 즉시 A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들이 출동하였으니 무조건 튀라"고 하여 A를 도피하게 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경합
- ② 도주원조죄와 직무유기죄의 상상적경합
- ③ 직무유기죄
- ④ 도주원조죄
- ⑤ 범인도피죄

32.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명예훼손죄의 객체와 신용훼손죄의 객체는 자연인에 한하지 않고 법인과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 ② 하나의 행위로 죽은 사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적시한 사실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과산자인 甲의 과산에 관한 사실을 알린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만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는 현실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신용을 훼손시킬 것을 요하지는 않는 위험범이다.
- ⑤ 명예훼손행위와 신용훼손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행할 필요가 있다.

33. 다음 사실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형사책임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은 甲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생각으로 단란주점 앞길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가다가 甲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35만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계속하여 위 단란주점에서 약 15km 떨어진 축구경기장 부근까지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과 甲이 사고처리에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다.

- | | |
|---------------------|----------------------|
| ① 강도상해죄 | ② 강도상해죄의 방조범 |
| ③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경합범 | ④ 강도상해죄와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 |
| ⑤ 약취유인죄와 강도상해죄의 경합범 | |

34. 문서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무형위조를 작성이라 하고, 유형위조를 위조라고 한다.
 B. 형법은 형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실질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C. 형식주의에 입각하면 무형위조는 ‘위조’가 안된다.
 D. 실질주의에 입각하면 내용이 진실인 유형위조는 ‘위조’가 안된다.
 E. 문서부정행사죄의 문서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에 한하지 않는다.
 F.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이 기존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고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한다.

- | | |
|-----------|-----------|
| ① A B C D | ② A B C F |
| ③ A B E F | ④ C D E F |
| ⑤ B C D E | |

35. 채무자 甲은 채권자 乙에게 자기가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양도하였다. 그런데 A에게 그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A가 甲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려 하자, 乙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A는 자기가 바빠서 乙을 만날 여유가 없으니, 甲이 직접 乙에게 변제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A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은 甲은 수령한 금전을 소비하였다.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 |
|---------|-------|
| ① 배임죄 | ② 무죄 |
| ③ 횡령죄 | ④ 사기죄 |
| ⑤ 부당이득죄 | |

36. 다음은 부동산명의신탁의 한 유형에 대한 형법적 평가에 관한 내용이다. 판례의 입장에 따라 ()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순서대로 조합한 것은?

- [1]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그 제3자에게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에 대한 ()가(이)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이루어졌고 같은 법이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무효로 된 후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2] ()가 신탁 받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고, 이어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수령한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소비하였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부동산 전체에 대한 ()를 외부에 발현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금원에 대한 ()가 성립된 이후에 수용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한 것은 ()로 볼 것이지 ()라 할 수 없다.

- ① 중간생략-신탁자-횡령죄-명의수탁자-불법영득의 의사-횡령죄-별개의 횡령죄-불가별적 사후행위
- ② 제3자간 명의신탁-신탁자-배임죄-명의수탁자-불법영득의 의사-횡령죄-횡령죄의 불가별적 사후행위-별개의 횡령죄
- ③ 계약명의신탁-원권리자-횡령죄의 공범-명의수탁자-임의처분의사-횡령죄-새로운 횡령죄-배임죄
- ④ 중간생략-신탁자-횡령죄-명의수탁자-불법영득의 의사-횡령죄-불가별적 사후행위-새로운 횡령죄
- ⑤ 제3자간 명의신탁-매도인-사기죄-매도인-사기죄의 고의-사기죄-횡령죄-새로운 법익침해

37. 작량감경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 작량감경은 중한 형인 징역형에 대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작량감경은 1회에 한하며, 거듭 작량감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범행 후 개전의 정이 있다는 것과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는 아니다.
- ④ 보호감호의 기간은 작량감경의 대상이 아니다.
- ⑤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감경절차 없이 징역 4년을 선고하면 위법이다.

38. 다음 중 포괄일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 문에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그 경우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야 한다.
- B.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적발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 C. 명의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일부를 소비하고, 수용되지 않은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전체에 대한 포괄일죄가 성립된다.
- D. 포괄일죄의 개개의 행위가 법개정 전후에 걸쳐서 행해진 경우에는 법정형의 경 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없다

39. 장물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 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으나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마음대로 이를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그 외에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으로부터 해당 차량을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운전해 준 때에는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 ⑤ 이중매도로 인한 배임죄에 제공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0. 몰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살인에 사용한 엽총을 저당잡고 받은 현금은 몰수할 수 없다.
- ② 주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않으면서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 ③ 수인이 공동하여 수수한 뇌물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로부터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 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나 그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 을 경우에는 평등하게 추징한다.
- ④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 케 하는 복권 및 특별사면이 있는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 ⑤ 몰수나 추징의 부가는 검사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다.